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1 ITIF, 전략 산업에서 중국의 글로벌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 권고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전략적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글로벌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권고 조치를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26.3)

* Mobilizing for Techno-Economic War, Part 2: Slowing China's Advance

※ 본 고에서는 국가 경제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 산업이라는 의미에서 원문의 'national economic power industries'를 전략적 핵심 산업으로 통칭

- (정책 변화의 필요성) 전략적 핵심 산업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새로운 장이 되면서, 중국의 산업 발전 속도를 '늦추는' 정책적 접근방법이 필요해진 상황
 -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국력(National power)은 적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적대국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상대적 강점으로 재정의
 - 전략적 핵심 산업은 글로벌 기술·경제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반도체, 공작기계, AI, 항공우주 등이 포함
 - 전략적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대체로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수록 미국과 동맹국은 손해를 경험하는 방식(win-lose)으로 전개
 -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에는 중국의 글로벌 패권 장악 시도에 맞서 전략적 핵심 산업을 강화하고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
 - 그러나 이미 중국의 중상주의* 정책이 강력히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 내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정책으로는 중국의 공세에 대응 불가
 - *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정책, 수출 극대화, 수입 제한 등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기술 패권을 노리는 전략을 의미
 - 이 점에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중국의 산업 발전의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
- (대중국 수출 통제의 한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활용하는 주요 수단인 대중국 수출 통제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한계가 존재
 - 화웨이 제재 사례*에서 보듯 자체 기술력과 공급망을 구축한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수출 통제는 효과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보복 조치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
 - * 미국은 사이버보안 우려로 '18년부터 단계적으로 미국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고, '19년에는 화웨이를 수출 금지 대상 기업 목록에 올렸으나 화웨이는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했고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도 '18년 29%에서 '24년 31%로 확대

- (주요 내용) 보고서는 중국의 전략적 핵심 산업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을 5가지 범주로 분류해 제시

1. 중국의 지식 습득 제한

- 중국은 서방 국가들의 지식에 크게 의존해 경제·기술 발전을 이뤄왔으므로 외국 지식 습득의 주요 경로인 대학, 정부, 기업을 통한 지식 습득을 차단

〈 중국의 지식 습득 제한을 위한 권고사항 〉

구분	주요 권고 조치
대학 및 정부의 연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대학 및 연방자금지원연구개발센터(FFRDC*)에서 중국 국적자인 박사후 연구원 수 제한(국적 보고 의무화, 행적 추적 등) *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 미국 정부를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 미국 연구대학에 대한 중국의 자금 지원 금지 • 전략적 핵심 산업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공동 연구 시 정보 공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지원 사전승인제, 연구 보안 입법, 연구 보안 지침(NSPM-33) 개선 등 • 중국 STEM 분야 유학생 선발 기준 개선안 마련 •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중 과학기술 협정에 제약 설정
기업 지식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악관 지식재산권 집행 조정관 직책 복원 • 미국 외국인투자심의회(CFIUS)의 심사 및 감독 권한 강화, 중국계 기업 등록부 운영 등으로 중국의 '위장 공격(False Flagging)'에 대응 • 미국 기업 파산 절차에서 중요 자산이 중국 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법원에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추진 •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개정해 '안보'만이 아니라 '미국의 리더십'에 위협이 되는 중국 투자에 대한 심사 강화 • 미국 내 중국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제한 • FBI의 산업 스파이 예방·적발·조사 예산 및 역량 확대

2-1. 중국산 수입 억제

- 저렴한 중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와 기업의 불만이 예상되지만,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고려해 중국산 제품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 도입

〈 중국산 수입 억제를 위한 권고사항 〉

구분	주요 권고 조치
거래 제한 기업 목록 내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부의 거래 제한 대상 기업 목록(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 기업 제품 수입 불허
관세법 337조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 거래 행위'를 광범위하게 막기 위해 관련 조항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기술·산업 보조금,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 • 특정 제품군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금지 명령 허용
사이버 위험 기반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금지 조치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수입을 금지하는 데에 있어 상무부 BIS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 중국 기업이 지배력을 가진 미국 기업을 통한 기술 라이선스 금지



구분	주요 권고 조치
정부 조달 제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 정부 계약에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연방 정부 계약에서 일제히 배제 연방 정부 조달 규정 엄중 시행 및 중국 기업 목록 조정
중국산 표시 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가 중국 제조 제품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라벨링 요건 강화
중국산 위조·불법복제 제품 검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유입 위조 상품 배송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AI 기반 솔루션 도입
중국산 수입 제한 규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23 NDAA) 5949조에 명시된 중국 반도체 수입 제한 규정을 전략적 핵심 산업과 관련된 모든 기술 제품으로 확대

2-2. 중국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 중국 기업의 발전을 늦추기 위해서는 수입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 흘러 들어가는 미국의 자금 투자 차단도 필요

〈 중국 기업 자금 지원 제한을 위한 권고사항 〉

구분	주요 권고 조치
중국 기업 지원 주·지방 정부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지방·주·연방 정부 등이 미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에 자금(인센티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련 입법 추진
공적 연금의 중국 투자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연금의 중국 기업 투자를 제한한 주(애리조나 등)의 조치 법제화 퇴직연금이 중국 정부 기업 또는 중국 기반 기업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중국 자본 기반 미국 기업을 정부의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에서 배제
정부 연구비 지원 시 중국의 이해관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정부의 연구 지원금이 중국과 연계된 기업·기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더 잘 식별해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3. 중국 중상주의 정책의 부정적 영향 축소

- 중국 중상주의 정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채택

〈 중국 중상주의 정책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권고사항 〉

구분	주요 권고 조치
중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 관련 WTO 소송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정부의 대규모 산업 보조금 정보 미공개 행위(WTO 규정 위반에 해당)에 대해 EU와 함께 WTO 제소 추진
제3자 소송에 대한 중국의 자금 지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정부가 미국 내 제3자 소송에 참여하며 민감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그들의 경쟁업체를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관련 법·제도 마련
반독점법으로 반경쟁 관행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FTC), 국무부 등의 독점 규제 권한 적극 활용
SEP 남용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이 표준필수특허(SEP*) 제도를 근거로 필수특허 보유 기업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동맹국 차원에서 대응 전략 마련 * Standard Essential Patent : 특정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부당한 로열티 요구나 라이선스 계약 거부를 금지

4. 중국 내 동맹국들의 생산 축소

- 중국 내 위치한 미국 및 동맹국들의 수출품 제조 시설이 중국 경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도록 장려하는 정책 시행

〈 중국 내 생산 축소를 위한 권고사항 〉

구분	주요 권고 조치
북미 통합 시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멕시코·캐나다간 무역협정(USMCA)에 역내 경제 보호 규정 마련 • USMCA에서 ‘원산지 규정’ 정의를 개선해 중국 중상주의 정책의 수혜 제품 (또는 원자재)의 미국 시장 진출 차단 • 비시장경제 국가(중국 등)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견제 강화
중국 밖 생산 허브 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주요 동맹국 공동의 글로벌 제조 허브 구축 합의
리쇼어링 인센티브 펀드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시설을 본국으로 이전한 기업을 지원하는 100억 달러 규모 기금 조성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들을 위한 세제 혜택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 생산시설을 미국 노동부가 정한 ‘노동력 과잉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추진
기업 ESG 보고서에서 중국 내 생산 감축 정보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들이 공개하는 ESG 보고서에서 중국 내 생산을 줄이는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중국산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장기적인 관세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수입되는 최종 소비재에 대한 단계적 관세 인상 법제화

5. 비동맹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

- 항공우주, 소프트웨어, 바이오의약품, 반도체 등 고정 비용이 높은 산업 분야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필수
- 더욱이 미국 외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다면 중국의 재투자 및 시장 확장 역량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선진 기업·산업의 점유율 확대가 필요

〈 비동맹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권고사항 〉

구분	주요 권고 조치
수출입 은행 확대·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기업이 제3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때 보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 은행 대출 지원을 확대·개혁
국제개발금융공사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금융공사를 강화해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자본과 경쟁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및 동맹국의 자본 참여 확대 • 국제개발금융공사를 활용해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 개도국과 협력 •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제도적 역량과 전문성 확대
수출 활성화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부를 통해 국내외로 조화로운 교역 촉진 시스템 구축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 개도국에 대한 전략적 핵심 산업 수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핵심 산업 분야 글로벌 수출(특히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 개도국 대상) 촉진 프로그램 지원 • 국무부가 서방 국가들 간 동맹을 주도해 이들 시장에서 전략적 핵심 산업 부문의 시장 점유율 확대
외국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프로그램에서 무기 수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은행의 무기 수출 지원 제한 축소 • 외국군사판매 프로그램에 대한 대출 및 보조금 지원 제공 • 외국군사판매 프로그램 관련 장벽 축소 • 중국과의 기술·경제적 방위 산업 경쟁을 위해 국방부 내 전담 부서 설립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을 주고 계약을 따내는 중국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뇌물 수수를 금지하는 해외부패방지법을 완화·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구분	주요 권고 조치
미국 정보기관을 통한 중국 기업 입찰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정보기관들이 제3국 정부에 중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입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중국 기업을 견제
중국과 경쟁하는 지역에서 정부 관료 대상 교육 및 기타 아웃리치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주요 지역에서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국무부 등의 관련 예산 확대

출처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2026.3.30.)
<https://www2.itif.org/2026-slowing-chinas-advance.pdf>